

2009년 각국 노동정책의 추이와 시사점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금융부문의 위기로부터 시작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는 노동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고, 실업규모가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은 고용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지목하고 있다. 경기침체의 발원지인 미국의 경우 지난 16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실업률은 연초 4.7%에서 7.2%까지 치솟았고(2008년 12월), 앞으로 8%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등장하면서 일자리 창출이 새로 취임하는 오바마 정부 최대의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경기부양과 2년간 300만~4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사회간접자본과 에너지와 같은 녹색산업 등에 775조 달러 규모의 집중적 재정투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고용촉진과 실직자의 생계를 보전하기 위해 일자리 보조금의 역할을 하는 세금 감면(기업 대상), 실업급여제도의 개선, 푸드스탬프(Food Stamp) 적용의 확대, 근로자 및 실직자에 대한 세금 감면, 교육훈련 및 고용서비스의 제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징적인 것은 전일제(full-time) 일자리의 창출을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조건이 제공되는 일자리 제공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오바마 당선자는 노사관계의 개혁과 일·직장 양립에 대해 ‘근로자자유선택법(Employee Free Choice Act)’, 유급병가의 확대 등의 이슈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도 경제활동인구와 유효구인배율이 감소하는 추이가 나타나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경기부양책과 일자리 창출이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실업급여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재정투입을 통해 2015년까지

환경시장을 100조 엔 규모로 성장시키고 2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한편 경기침체가 도래하면서 급증하는 비정규직의 실업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네거티브 리스트로 바뀐 후 급격히 증가했던 파견근로자에 대한 실직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에는 단기파견에 대해 기간에 대한 규제, 사전예고없는 계약 중도해지에 대한 규제, 실직 파견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프로그램 도입, 실직 비정규직에 대한 생활지원 등이 논의되고 있다.

호주는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어 전년도 수준의 경제성장을 예상하고 있지만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중산층 이하의 가정에 크리스마스 보너스로 1,000 호주달러를 지급하는 등 선제적인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노동당 집권 이전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가 추진되면서 발생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법제도의 개정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근로계약 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이 5개 항목에서 10개 항목(38시간 주당 최대 근무시간, 미취학연령 아동의 부모에 대한 근무시간 조정, 육아휴직권, 연중 최소 4주 휴가일수, 간병휴가, 사회봉사휴가, 장기근속 포상휴가, 공휴일, 계약해지 통고 및 정리해고 보상금, 근로자에 대한 공정한 정보 제공)으로 강화되는 조치를 취했다. 현재 호주 하원에서 심사 중에 있는 공정근로법안(Fair Work Bill)의 내용에 따르면 Fair Work Australia(FWA) 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호주의 노동문제를 다루게 될 예정인데, FWA의 주요 권한으로는 노사협약에 대한 인준권, 최저임금의 조정, 부당해고와 노사분쟁의 처리와 조정이 포함된다.

최근 세계 각국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이와 병행되는 또는 누적되어 온 노동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노동시장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기부양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수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어느 정도 회복되기 전까지는 국내 경제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는 세계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견뎌내는 위기극복형 거시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시장에서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일자리 및 생계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녹색 뉴딜’ 정책을 필두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투입을 크게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비록 재정투입으로 제공되는 일자리의 성격이 단기적 또는 임시적인 문제로 비판을 받더라도 경기회복을 통한 인력수요의 확대가 노동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기 전까지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과 인적자본의 상실을 막을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제공, 경기침체의 영향을 직접 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대 등을 통해 위기의 기간을 견뎌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장기적 측면에서는 이번 사태와 같이 해외 경제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 실물, 노동시장의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견실한 내수시장을 구축할 수 있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KLI**